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의 구상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머리말

어느덧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3년,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특구 설치를 표방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사건들은 남북 협력과 북한 경제사에 큰 이정표를 남겨 협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기대를 안겨 주었다. 이후 남북 장관급 회담과 금강산 관광, 철도와 도로 연결, 체육 교류가 추진되는 등,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크게 가속화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남북한 협력이 추진되었고, 몇 개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좁은 분야와 제한된 지역, 기관 등에 편중된 협력으로 남북 협력을 원하는 단체간에 과열이 빚어지고, 이마저도 정치상황 변동에 자주 휘말리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협력 내용에서도 1-2차례의 접촉이나 물자 지원, 인력 양성 등에 치우쳐 대규모 경제 협력과 연계된 다양하고 심도 깊은 과학기술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북일 관계 악화와 사스(SARS) 문제 등으로 기존의 협력마저도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식과 개성공단 착공식을 개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장관급 회담을 통해 국가 간 이해를 조절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북한 통과를 타진하는 등의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상에서도 남북한 협력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키고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특구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 안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재검토하고 남북한 각 기관들의 수요를 반영한 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과학기술 협력은 북한의 현실 문제를 타개하고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며,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인 도약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 내 동포, 청년들에게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대립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공동 번영, 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취지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의 기본 구상과 향후 과제들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한의 현실 수요를 충족하고 정치 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며 동북아 시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현성 높은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과학기술부 등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협력과 민간차원의 협력으로 대별된다. 과학기술부는 주로 남북한 공동연구와 관련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슈퍼옥수수와 인공씨감자 보급, 컴퓨터교사 양성, 북한 적응형 농약의 개발과 시험, 과학기술용어사전 편찬, 한반도 식물지 작성, 과학기술자료 교환 등의 직접적인 남북한 공동연구와 공동 심포지엄, 북한 관련 정책연구, 북한의 과학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기초연구, 학술조사 활동 등이 포함된다.

민간분야에서는 삼성전자, IMRI, 하나비즈, 훈넷, 넷피아, 하나로통신 등이 IT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대북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북한의 IT 인력을 훈련시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하거나, 기존설비를 이용한 임가공,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간 분야 협력에서 과학기술 요소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 등 모든 분야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일부는 담보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은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성과가 미약하고 정치 논리가 개입되며, 중개기구를 통한 협력으로 이해 당사자간, 전문가들간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악화와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북한 협력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협력도 중국이나 해운을 통한 협력과 이로 인한 비용 상승, 북한의 낮은 인프라 수준, 중개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잦은 중단, 납기 지연, 인건비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고, 낮은 기술 단계의 투자와 임가공 위주의 경험으로 심도 깊은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큰 기대를 모았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성 등도 현실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공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개 협력과제에서도 북한측 대상기관과 지역의 편중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 협력 내용도 인력 양성 등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보다 심도 깊은 공동연구와 첨단기술 이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등 북한에서의 법적, 제도적 보호조치 미흡과 바세나르체제 등으로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과감한 대북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해외 동포 과학자들은 북한의 수요와 일치하는 분야에서 심도 깊은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여 그 동안 상당한 경험과 자료, 인맥을 축적하였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북한의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협력계획을 세우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 창구를 개설하며, 기존의 경험에서 과학기술 요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개발한다면 현재보다 상당히 다양하고 심도 깊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3.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확대 가능성

과학기술은 안보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당사국간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 협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동서독의 교류에서도 1972년의 “기본조약”에 과학기술 협력을 명시하고 1973년에 관련 회담이 열리기도 하였으나, 기술이전에 대한 서독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동독정부의 소련기술 의존으로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소련의 개혁개방으로 냉전이 해소된 80년대 중반 이후야 동서독 과학기술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 1987년 9월에 “동서독 과학기술 협정”이 체결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도 전쟁 경험과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고, 바세나르 협약 등을 통한 국제적 규제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 상황이 더해져 민감한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단, 위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처럼 북한 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협력 기회를 산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장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기존의 협력 창구를 유지, 발전시키고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 체계적인 협력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로 획기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했다. 비록 이 조치가 생산성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과학기술계와 남북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가격과 임금, 환율 인상, 차등임금제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위상 제고 등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업무 복귀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입 증대와 연구소 수익사업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는 투입 능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와 우수 연구소에 대한 금액 차원의 위탁연구를 증대하여 기술거래 활성화와 응용연구기관의 실질적인 반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책임제와 연구원 유동, 연구소 창업 등이 현실화하고 실리 추구를 매개로 한 우수연구소들의 대외개방과 수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과학원 산하 기관들과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런 경향들이 대남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로, 개성공단 중심의 특구 설치도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주로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므로 과학기술 협력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대중국 투자 경험에서 보는 것 같이, 특구 지역에서의 수익이 보장되고 북한이 시장경제 운용방식과 경영기법을 배워 국내 체제 개혁을 가속화한다면 전반적인 협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소유와 용도를 분명히 제한할 수 있는 특구 지역에 컴퓨터 등 대북 반출이 금지되었던 기기들

을 도입함으로써 부진했던 S/W 등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셋째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북한의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3-2007)”과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2003-2006)”도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은 경제 회복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와 식량문제 해결, 일부 첨단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에서는 5개년계획의 앞부분인 전력과 석탄문제 해결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투입여력이 부족해 10여 년간 경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계를 총동원해 국가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구개발 투입 역량과 관련 기술, 설비가 부족해 단기간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 김정일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에서도 이들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그리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 다행히 남한이 이들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의 변화 여부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안보 문제에 덜 민감한 농업, 식량 분야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로, 북한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철도, 도로 연결과 에너지 협력 등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이 별도의 기술 체계와 산업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공동 운영을 위해서는 심도 깊은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만과 중국의 협력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경제체제가 다른 단일민족 분단국의 경제 협력에는 일반적인 상황과 상당히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유형화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당사자들의 협력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4. 협력계획의 골격과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

과학기술부는 1994년과 2000년에도 20여 쪽 분량의 간략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두 계획은 북핵 협상 타결과 남북정상회담 개최후의 상승 분위기를 반영해 상당히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계획이 수립되어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북한의 참여를 수반하지 못해 대부분의 계획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말았다.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북한과학기술연구회¹⁾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목표는 “현행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당면 과제 해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 북한 연구의 특성상 대외적으로는 “우리민족 과학기술 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주요 내용과 추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1)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공동수요의 창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자간의 공동 협력 수요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국내 각 기관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수요를 수집, 정리하고 있고 다양한 통로로 북한측의 대남 과학기술협력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과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주력 연구과제 등을 참조하여 북한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들을 선별하고 이 안에서 남북협력이 가능한 과제들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수요가 일치하는 과제를 찾아 정식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북한의 주력 연구과제 중 90% 이상이 생산 현장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기술체제와 원료 수급체제가 달라 남한측의 연구과제와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현장 연구에 강한 남한측 기업들은 수익구조에 민감해 대가가 없는 기술협력에 소극적이고, 대학은 기초연구 중심으로서 예산 구조와 생산설비에서 취약하다. 출연연구소들도 예산 확보가 용이한 연구나 미래형 첨단연구에 치중해 북한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연구를 통해 당장 얻을 것이 부족하더라도, 비교적 순수한 동기에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협력에 나서는 기관이나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 과학원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어 남한측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공동수요 창출과 조정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북한 과학원은 1998년에 이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통합해 과학기술 행정과 연구를 동시에 관장하는 거대한 기관이 되었다. 우리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이공계 출연연구소들 모두 합친 기능을 과학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구 과제들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이 모두 동일 기관의 관리 하에 장기적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남한측 과제는 각 부서별로 과제 성격이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되고 연도별 과제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공동연구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의 국가연구개발계획 중 일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별도의 국제협력 과제들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남북한도 사업의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공개해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 회생의 중책을 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예산과 기술도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런 프로그램이 잘 정착된다면 북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고 남한도 유효한 대북 협력 수단을 하나 더 가지게 될 것이다.

2) 남북한 경제협력과 특구를 통한 과학기술협력 확대

식량, 철도, 도로, 에너지, 기상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협력 분야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방안에서 북한에 제시하는 분야에서 과학기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 정리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수익성 악화와 임가공 중심의 대북 진출로 민간 기업을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확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협에서는 상당한 기술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다.

남북 관계의 특성상 이런 협력에는 일반적인 기술이전이나 협력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형화해서 과학기술계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차원에서 종합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각 분야별, 부처별, 기관별, 지역별로 편중된 현행 남북 과학기술협력 과제들을 시정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협력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이를 위해 경협에 관여하는 관련 출연연구소 북한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 확대는 민간 차원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협력을 선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협력은 예산 통제가 쉽고 정부의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각종 안전장치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시의 적절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대남 협력을 통제하는 북한의 특성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 모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 중심의 특구 설치 방안에서도 과학기술협력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단 설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기에는 인력 양성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경공업과 특정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간다면 현재 보다 상당히 다양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도 거론했던 것처럼, 소유와 용도를 분명히 제한할 수 있는 특구 지역에 컴퓨터 등 대북 반출이 금지되었던 기기들을 도입함으로써 부진했던 S/W 등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협력 창구 개설과 추진체제 정비

그 동안의 대 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마저도 농업과학원과 대학,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등에 편중되어 북한의 주무부서인 과학원과의 협력이 전무하였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과학기술 주무부서인 과학기술부와 과학원간의 직접적인 협력 창구나 협력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2년 10월 5, 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과학기술심포지엄”을 통해 우리측 출연연구소와 북한 과학원 사이에 공식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이다.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과 조선과학원 사이의 우리나라(한반도) 식물지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조선과학원 산하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사이의 과학기술정보교류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은 남북한 최고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북한 과학원과 직접 협력하는 것들이다. 특히 식물지 사업은 북한 과학원에서도 담당 참사가 대표를 맡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고 구성원들의 열의도 높으며 향후 추출물 은행과 종자 은행, 천연약물 등 인접 분야로 쉽게 확대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이 공동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 협력 내용과 범위를 과학원 산하 타 연구소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과학원과의 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면서 타 분야로 확대되면, 양측 주무부서간의 직접적인 협력 창구 개설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북한측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의 성과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식물지 사업처럼 최근의 안보 상황에 무관하면서도 남북한 상호간에 학술적 의의가 큰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과 해외동포를 통한 협력을 병행하여 다양한 협력과제와 실적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측 주무부서간의 협력 창구 개설이 현실화되면 남한측 담당 부서와 추진체제 정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과학원의 업무 범위가 넓고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서 다루는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우리측도 각 부처, 기관간에 원활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부 등의 관련 기관과 원활히 협조하며 장기적으로 장관급 회담 등을 개최하여 대북 협상 과제에 과학기술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 안에서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안에 북한관련 부서를 확충하고 필요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인 업무는 가칭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 등을 설치하여 전담케 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연간 10억원 정도에 불과한 과학기술부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지원 예산과 타부서의 관련 예산을 단계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가 2001년도에 16조원을 넘어섰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경비만 해도 4조원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경비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5년간 단계별로 과학기술협력 예산을 확충하여 2007년에 총 100억원 규모에 도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여 개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단”을 선정해 연간 100억씩 10년간을 지원하고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과 민족의 공동 번영, 남북통일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선도하는 기관이라면, 20여 개가 넘는 프론티어 사업단 규모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예산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4) 유연한 협력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

남북한 협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세에 따라 상당한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계획도 이런 가변성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북한과학기술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세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수립과 과제의 성격별 구분 등이다.

향후 정세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은 북한 경제와 경험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수립하고 있다. 현재 초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본 정책지에 실린 김연철 교수의 시나리오 예측²⁾을 단순화하고 과학기술협력에 맞게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체제 또는 과학기술체제 변화 정도(현상 유지,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협력 수준(현상 유지, 확대)에 따라 북한의 변화 유형을 1) 전시형 통제체제, 2) 개방 없는 부분개혁, 3) 개혁 없는 부분 개방(특구 중심의 개방), 4) 개혁개방의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첫째, 전시형 통제체제라는 것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변화 움직임을 포기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협력이 위축될 것이므로 과학기술협력도 중단되거나 기존의 협력과제 중심으로 식량과 농업 등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추진될 것이다.

둘째, 개방 없는 부분개혁은 북한의 변화 의지는 높으나 대외관계가 위축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협력의 대폭 확대는 어려우나, 북한 우수 연구소들의 실리 추구하고 독립채산제 실시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현재의 대북 과학기술협력을 응용 연구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생산 현장에 편중된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과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개혁 없는 부분개방은 국제사회의 대북 참여도는 높으나 북한의 변화의지

2) 김연철,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와 남북경협”, 과학기술정책, 5/6

가 낮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경제협력은 위탁가공이나 특구 등의 제한된 지역에 국한될 것이므로 과학기술협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 대북 반출 규제에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일부 협력과제와 특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중심의 경험 프로젝트에 편승한 과학기술협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혁개방은 과학기술체제 개편을 포함한 북한의 내부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참여가 현재보다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협력이 증가하고 북한의 과학기술제도 대외협력에 나설 것이므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우리도 각종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별 대응과 함께 협력 유형도 과제 성격별로 인력교류, 공동연구, 위탁연구, 산업화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나 양측 협력기관의 특성,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유리한 협력 유형을 선택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와 상당히 다른 북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안보상의 긴장이 지속되면 과학기술협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반대로 북핵 해결 과정에서 긴장이 완화된다면 협력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대화에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향후 남북 협력에서 과학기술계가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이 이런 토대를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계획 참여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경제협력과 특구 등 국가 차원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 현재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측 주무부서간의 직접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획, 추진체제가 정비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계획, 주변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계기관들의 협력과 북한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본 계획 수립에 북한과 해외동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북한의 실질적인 참여를 수반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북한 과학원 담당자들, 해외동포 과학기술자들이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과학기술부(1994), “남북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안)”

과학기술부(2000),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이춘근, 김계수(2001),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200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배영자(2002),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